

6차시[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과 책임문제]

<학습목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교사, 학교장, 교육감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 가해행위와 자살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사와 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그 책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례>

사건의 개요

J도가 설치 운영하는 K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2011. 3. 초경부터 자신이 소속된 2학년 3반 학생인 B, C와 친하게 지내다가 2011. 3. 말경 H등학교에서 전학 와 같은 반에 배정된 D와도 가까워지게 되어, A자신을 포함한 B, C, D 4명만이 배타적으로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집단을 이룬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4.경부터 B가 위 집단을 주도하면서 A를 위 집단으로부터 배척하였다가 다시 위 집단에 끼워주는 것을 되풀이하였고, 그 때문에 평소 밝고 명랑하였던 A는 2011. 6.중순경부터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하여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1. 9.경 B는 ① A의 물건을 몰래 감추었다가 며칠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였고, ② A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A를 무시하였으며, ③ A가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다른 급우들에게 “교복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같이 놀지 마라.” 는 식으로 말하여 A를 놀리기도 하였고, ④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A가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려고 하면 C, D와 다른 식탁으로 옮겨 버리고 A가 따라 오면 다른 식탁으로 다시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A를 괴롭히거나 따돌렸다.

2011. 10. 초가 되면서, B, C, D는 A를 그 집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더 이상 A와 어울리지 않는 한편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A와 놀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 B는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아이로 요구를 무시하면 어떤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두려워 다른 학생들도 A와 함께 놀아 주지도 않고 A에게 말도 걸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A는 2011. 10. 말 경 자신의 전자사전이 없어지자 B나 C가 이를 숨긴 것으로 알고 이들에게 이를 따졌다가 자신의 오해로 밝혀져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B와 C에게 사과하였는데, 이들은 A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A를 몰아세움으로써 B, C, D와 A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뒤 A는 낮이 나간 듯한 표정에 아무 말이 없었고, 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교실을 드나드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D에게 자신과 함께 놀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B, C로부터 “D가 니 시다바리냐.”라는 말과 함께 면박을 당하였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B, C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야, A가 성격 이상하다. 같이 놀지 마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학교급식소로 몰려가 버렸다. 같은 날 16:00 하교할 무렵 B, C는 교실에서 A에게 약을 올리고 무엇인가를 따지며 A를 몰아세웠고, G와 함께 하교하는 A를 운동장에서 노려보고 지나가기도 하였는데, A는 집으로 가는 길에 G에게 “전교생이 다 알게 될 거다. 나 이제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니?”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고,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 15층에서 2장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한편 A는 2011. 9. 중순 2학기가 시작된 직 후 담임선생님인 T에게 자신이 B, C, D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담임선생님인 T는 A에게 “그런 문제는 친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으니 서로 잘 이야기 해봐라. 선생님이 나서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A를 돌려보냈고, 그 후 A의 문제에 대하여 학창시절 교우관계에서 겪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평소 조례시간과 종례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정도의 말만 하였다.

K여자고등학교 교장 Y는 2010년과 2011년 최근 2년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조차 하지 않았으며, A가 자살한 이후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담임선생님인 T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A의 아버지 F와 어머니 M은 B, C, D와 그 보호자 및 담임선생님인 T와 J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 아버지 F와 어머니 M의 B, C, D와 그 보호자 및 담임선생님인 T와 J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정직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교장 Y와 담임선생님인 T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Y교장과 T교사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은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사건의 쟁점

(1)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가한 행위가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통상적으로 장난을 치는 정도로 볼것인가, 아니면 피해학생을 만만하게 보고 지속적으로 놀리는 등 단순한 장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일종의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으로 볼 수있는가 하는 점과,

(2) 가해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행위와 피해학생의 자살하게 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과,

(3) 고등학교 2학년의 미성년자인 가해학생들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보호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과,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과

(5) 담임선생님과 학교장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 어떤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사건의 결말

① 평소 밝고 쾌활한 성격의 A는 원만한 교우관계를 보여 왔는데, 같은 학급의 B, C, D와 친하게 어울리는 집단을 형성한 이후 2011. 4.경 B 등에 의하여 위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하여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 점, ② 더 나아가 B는 C, D와 함께 의도적으로 A와의 대면, 대화 등을 피하고 A의 소지품을 은닉하며 A의 외모 등을 홍보거나 비난하는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A와 놀지 말 것을 요구함으로써 A로 하

여금 소외감, 수치심 등을 갖도록 하여 온 점, ③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도 B등의 위 요구에 동조하여 A와의 대화, 놀이 등을 피하는 등으로 A를 소외시켜 온 점, ④ A는 위와 같은 집단적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B, C, D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였으나 2학기가 되어서부터는 더욱 그 따돌리는 정도가 심하여진 점, 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사전 분실 사건 등으로 B 등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다시 관계회복을 원하는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같은 날 점심시간 후 하교할 때에도 계속하여 B등이 자신을 몰아세우며 놀리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서 귀가한 직후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기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아버지 F와 어머니 M의 B, C, D와 그 보호자 및 담임선생님인 T와 J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담임선생님 T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무) 제4항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교원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의무 중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학교장 Y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과 동조 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중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Y와 T는 학교장 및 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행정 감사 규정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법규위반의 정도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인 J도교육감이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장 Y 및 교사 T에 대한 정직처분 취

소청구는 타당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다.

전문가 의견

“집단따돌림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 및 제1의2호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규정된 학교폭력의 유형이다. 즉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의 유형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항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교원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속적,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보호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학생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학생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의2호),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의3호).

나. 판례의 태도

판례는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 <집단 따돌림 자살 사건>]

다. 집단괴롭힘(bullying)

집단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에는 구타,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과 소외, 심리적 배제 등 간접적인 폭력 모두를 포함 한다.

라.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정의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동법 제2조 3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동법 제2조 4호).

마. 서로 싸우다가 다친 경우의 문제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학생이 더 많이 다치고, 다른 학생은 조금 덜 다친 경우라면 싸움을 한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이 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때 가해학생에게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사안 조사결과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 가해학생들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보호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해학생 감독의무자)의 책임

(1) 가해학생의 책임

불법행위자인 가해학생 본인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 여기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 함은 책임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써, 통상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써 법률상 비난을 받고 어떤 법률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책임무능력자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만12세 미만인 경우는 민법 제7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한 지능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에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겐 대체로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학부모의 책임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실제로 그 친권자가 일반적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친권자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민법은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부모들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로서 부모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605 전원합의체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나. 교사 및 학교(설치경영자)의 책임 근거

학교 관계자(교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 즉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망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가해학생들의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또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담임교사인 소외 1로서는 학

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망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소외 1, 2는 망인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망인의 부모로부터 가해학생들과 망인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망인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 2의 위와 같은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2007. 4.26. 선고 2005다24318판결).

라 교사의 책임

교사의 개인 책임은 사립학교의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사립학교의 교사는 학교폭력 사고의 발생에 있어 그에게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학교설치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국·공립학교의 교사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 교사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실상 대폭 제한된다.

마. 교사의 학교 설치자로부터의 구상책임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교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결과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바. 가해학생 보호자의 책임과 교사 등 학교측의 책임과의 관계

가해학생의 부모의 법정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과 담임교사 등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학교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자의 책임은 병존할 수 있다고 보아 부모와 학교측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이 경우 어느 일방이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비율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교사 등 학교설치자와 부모 등 친권자측의 사고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여비율, 즉 교사와 친권자의 각자 보호·감독의무의 해태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원고와 피고들은 r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판결에 따라 각자 그 손해금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손해금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 즉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r등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이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원고의 피고들이 각기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형평의 원칙상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비율, 즉 책임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피고 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집단괴롭힘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였고 학교로서는 적극적인 감독 및 보호활동을 펼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책임이 작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집단괴롭힘의 경위, 피고 학생들의 가해 정도, 피고 학생들 부모의 감도 소홀, 원고의 피고 학생들에 대한 감독 소홀 및 r에 대한 보호 소홀의 정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대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4 대 6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8가합31880 구상금.

3. 교사 및 학교장의 의무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범위

대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판시하여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손해배상(기)].

나. 학교폭력 신고 의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 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교원의 법령준수 의무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원은 고용주인 국가나 학교 법인과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고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일정

한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대하여 일정한 역무를 제공한 의무를 진다. 교원의 직무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과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르는 각종 행정처분을 받는다.

4. 교원징계 사유 및 불복방법

가. 징계의 의의

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특별권력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주인 입장에 기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는데, 이 징계벌을 받을 지위를 징계책임이라고하고, 징계벌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나. 형벌과 징계벌과의 차이

양자는 ‘제재’라는 점에서 같으며, 공무원이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징계벌의 대상이 됨과 아울러 형사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 형벌은 일반통치권(형벌권)에 그 근거를 두는데, 징계벌은 공무원 내부에서 성립한 사용주의 입장에서 갖는 권력(특별권력)에 근거를 두는 점이 다르며, (2) 형벌은 반사회적인 법익침해에 대하여 국가사회의 일반적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제재인데 반하여, 징계벌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제재이며, (3) 징계벌은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에서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부하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도 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되며, (4)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는 병과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법은 형사소추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

다. 징계의 사유 및 시효

징계의 사유란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서정한 사유로는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감사원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때이다.

5. 교원징계와 재량권 일탈 남용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정리하기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

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 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